

8월 주요 시사

I. 주요시사

II. 시사 파헤치기

I. 주요시사

■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

홍콩시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콩 입법회가 '범죄인 인도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하자, 홍콩시민들은 페이스북등 sns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회준비에 들어갔고, 2019년 6월 9일부터 시위대 추산 103만명이 참가하여,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작하여 홍콩 정부청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러한 홍콩시민들의 반대시위와 행진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홍콩 시위대들은 '법안의 완전한 폐기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남북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도 지역의 제대군인들을 위한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개소식을 열고 강원지역 군부대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제대군인의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펼친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2004년 서울센터를 시작으로 이번 강원센터까지 전국 10개의 기관이 운영되며,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8만 6천여 명에게 전직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향후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는 강원대학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드론, 3D프린팅, App개발 등 교육과 실제 창업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집값을 안정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민간 택지까지 확대해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위해 나선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직접 나선 이유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다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이 집값을 올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출범

광주형 일자리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20일 출범하였다. 올해초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을 맺은 지 7개월만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 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선 완성차 200만 대가 놀 정도로 공급과잉이 심각한데, 생산설비나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적절하게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부터 방사능 위험이 있는 일본산 일부 수입식품의 안전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식약처는 21일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 수거량을 2배로 늘리고, 반송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검사 횟수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검사가 강화되는 일본산 수입품목은 총 17개다. 고형차와 침출차, 당류 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과 커피, 블루베리 등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빌베리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일본산 8개현의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때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송 조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없어 모두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 7월 관광객 7.6% 줄었는데.. “문제없다” 큰소리 치는 일본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이 일본 정부 통계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 관광청 장관은 내년 해외 관광객 4000만명 유치 목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21일 발표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에 온 한국인 여행자 수는 56만 1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줄었다. 이는 올해 들어 월간 단위로 가장 적은 것이다.

JNTO가 집계한 7월의 국가별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의 감소폭(-7.6%)이 가장 컸고 그다음이 인도네시아(-4.9%), 홍콩(-4.4%), 태국(-1.6%), 말레이시아(-0.4%), 대만(-0.3%) 순이었다. 그 밖의 다른 국가는 모두 증가한 가운데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중국인이 19.5%나 늘어 한국인 감소분을 메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다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은 내년도 방일 외국인 4000만명 유치 목표를 향해 견조하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한국인이 방일 외국인의 약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확산해 항공노선 감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며 목표 달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 이달 감소폭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 해결 ‘난망’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등 중국의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입장 차이가 커 단기간내에 분쟁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

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제금융센터의 '미중 무역분쟁 경과,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추가 관세부과로 시작된 무역분쟁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중국 첨단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거쳐 환율갈등으로 격화하고 개도국 지위 철회 촉구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무역통계를 기준 미국은 대중 수입 54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 중국은 대미 수입 1200억달러 가운데 1100억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무역전쟁이 격화했다.

미국은 특히 미 정부 기관의 중국 기업제품 조달 금지와 미국 기업들의 대중 첨단기업 수출제한 등 중국 첨단기업들에 대해 한 규제를 강화했고, 이달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용인했고, 미국은 다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송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경기도 안산의 동산고, 전라북도 전주의 상산고, 부산의 해운대고 등에 대한 재지정 취소가 결정되었다. 특히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며 자사고 폐지 정책은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 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성격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부자들의 귀족학교로 사교육을 팽창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자사고 등 특권학교는 폐지되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아젠다넷,참조)

■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했던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선 정부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지난 4월 최종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했다. 최종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의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시사아젠다넷,참조)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대상)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일 양국 신뢰관계 손상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가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하며 일본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일관계 경색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산업 영향 전망

-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 일각에서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 정부가 향후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첨단 소재 등의 개발에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해 향후 한국의 기술 개발과 함께 조달처의 다양화를 전망
-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한국이 수출규제로 맞대응할 시, 한국의 GDP는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될 경우 한국의 GDP는 2.2%로 감소하고, 45%로 확대 시 4.2%까지 감소, 맞대응시 5.4%까지 커질 것으로 분석

□ 국민적 대응

- 우리 국민들도 일본이 역사적 과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가운데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제품 및 일본관광 불매 운동을 시작, 항의에 나섬
-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들도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일본 여행도 줄줄이 취소.
- 중소기업들과 편의점 업주 등 소상공인들도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본 제품이 사라지고 있으며, 일본기업 신제품 출시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대응 차원에서 일본 제품 판매를 중지키로 함
- 한편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제재 관련해 관세 보복, 관광금지, 수출 규제 등 정부의 대응을 촉구

II. 시사 파헤치기

■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 경제개발관점 의견

우선 저는 경제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 뿐 아니라 세계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제개발이 끝나 어느정도의 경제적 수준, 최소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나라에게는 제가 말하는 논지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제가 말하는 논지는 경제가 낙후된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첫째, 어떤 환경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을 통해 경제상황을 좋게 만든다면 구할 수 있는 한 나라의 국민들을 환경보존이라는 이유로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이 쉽사리 죽어가고 낙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제개발을 통해 극복한 사례는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 개발은 필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환경의 희생은 불가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개발이 없다면 국민들의 의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무균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상 삶을 살면서 질병은 누구나 앓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의료비는 턱없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경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도 힘든데 그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기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등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격입니다. 경제개발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가 튼튼해져야 국민들의 의료복지 역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가 안된 나라 - 그래서 의료비가 높은 나라. 이는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국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위의 이유로 경제개발은 조금의 환경적 손실이 있더라도 필요합니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경제개발이 필요합니다.

삶의 질은 보건, 건강수준, 주거환경, 식사의 영양성, 교육수준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에 직결되는 것이 삶의 질인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7년의 UNDP, 유엔 개발 계획의 국가별 인간 개발 지수 통계자료와 2007년도의 한국은행의 국가별 GDP 통계자료를 보면 인간 개발 지수와 GDP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인간 개발 지수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경제 수준 정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의 이유로 경제개발은 필수적입니다.

넷째,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 경안천입니다. 경기 경안천은 개발을 통해 하천의 자정능력을 개선했으며 하천의 물리적 서식공간을 다양화하는 등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경제개발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그 자금을 위해서 경제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개발은 필수불가결합니다.

○ 환경보호관점 의견

현재, 지구는 지난 세월동안의 개발로 인한 휴우증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새로운 난치병들 등 개발로 인한 폐해로 인류는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에너지 이용량이 지금의 2배만 되어도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구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리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발전은 불가능하며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첫째,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낳고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힘들거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했던 사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 쌍방울 개발은 97년 1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계기로 덕유산 국립공원의 광범위한 범위를 개발했고 이로 인해 덕유산은 지도에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덕유산 공원은 원래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지가 펼쳐진 원시림 지역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희귀해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구상나무와 주목은 개발로 인해 현재 거의 대부분 고사한 상태입니다. 주목은 특히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치가 높은 식물인데 개발로 인해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이렇듯 개발은 환경파괴를 가져옵니다. 환경은 지구 내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식물 혹은 환경의 일부가 완전히 파괴되면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경제개발은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가져옵니다.

또한 생산방법은 극도로 기계화되고 분업화되면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소외를 낳게 됩니다. 경제개발을 통해 세워지게 된 공장에서는 노동자를 하나의 섹션에만 배치하여 단순반복적인 일을 시키며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최저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신체가 다치든, 병에 걸리든 전혀 개의치않고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는 하는 공장의 모습은 경제개발로 인한 인간성 말살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경제 개발은 이러한 것들을 시발점으로 인간 소외, 사회적 범죄 증가 등의 악순환을 낳습니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우울증 증가, 자살률 증가 자료.** 계속되는 경제 개발은 이러한 것들을 촉구시킬 뿐입니다. 회복시킬 수는 없더라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선진국의 계속되는 개발을 중, 후진국이 경제발전의 모형으로 삼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구에는 환경오염의 수용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탓에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잘 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인구는 세계인구의 5% 미만이나 미국의 자연 자원의 사용량은 전세계의 30% 이상입니다. 이런 나라를 중, 후진국은 발전하기 위한 모델로 삼고 개발을 한다면 지구의 환경오염은 막대해질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구의

환경오염을 막는 녹색의 자연은 중, 후진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개발로 인해 그 방대한 자연이 파괴된다면 환경오염은 더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인간의 멸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개발은 한 번의 개발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개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은 어디로부터 가져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개발입니다. 이렇듯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해야 하며, 개발은 끝없는 개발을 불러옵니다. 멈출 수 없는 개발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아야 하는 환경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더라도 지구에는 우리의 후대가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기 위해 개발을 하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면 우리의 후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파괴된 환경을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를 위해 후대에게 파괴된 환경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어야 할 선대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훗일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한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 이슈 배경

민간차량 2부제는 차량 2부제란 홀짝제라고도 불리는데, 차량번호가 홀수, 짝수인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짝수인 날은 차량번호가 짝수인 차량만의 운영을 허용하고, 홀수인 날은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만의 운영만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 미세먼지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행정직원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차량 2부제란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민간차량에 대하여도 의무적 2부제로 확장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찬성측 논리

1. 국내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높은 비중

2016년 5월 NASA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한반도 대기오염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52%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은 수도권외의 경우 경유차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세먼지 사태의 주요원인은 국내적 요인에 있고 차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민간차량 2부제의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확인 됨

과거 국내 및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에 따르면, 2002 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가 줄고, 미세먼지 농도가 21%가량 감소되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차량 2부제가 의무시행된 최근 평창 올림픽 때도 강릉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6~2017 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량 감소함.

추가로 중국에서도 같은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2015 년 베이징 적색경보 발령 당시 차량 2부제 등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17~25%가량 감소되었다.

3.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차량 2부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기초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현재 공공, 행정직원 소유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차량 2부제의 경우에도, 외교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적용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차량 2부제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다면 불편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반대측 논리

1.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순위

최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기오염지도를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입이다. 이는 실시간 대기오염지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내 미세먼지농도가 중국 공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국내보다 국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 년 1 월 중순 한반도를 덮은 미세먼지의 69~82%가 중국발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요인에 대한 대책인 민간 차량 2부제가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차량을 영업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 큰 부담

자그마치 민간차량 절반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간 차량 2부제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준다. 특히 차량을 영업수단으로 이용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이는 치명적이다.

설령 운송업에서 쓰이는 영업용 차량을 예외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동이 필수적인 각종 영업직, 출장이 잦은 직종,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과 같이 소위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생계형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의 차량 2 부제로 인하여 그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차량은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계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국민들의 이동의 불편을 초래함

상당수의 국민은 출퇴근, 혹은 통학을 차량을 통행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차량의 이용이 제한된다면 일반 국민의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통행(동일생활권인 대도시권에서 지역주민들이 시·도 경계를 초월하여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은 2010 년 1,000 만 명에 이르고 이후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세를 대중교통이 감당하지 못해 출근길이 매우 혼잡해진 현재의 상태에서 차량 2 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출퇴근의 불편을 매우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지방의 경우, 소수의 대도시만이 지하철 노선이 구비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차량제한은 이동의 불편을 넘어, 이동의 불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